

인천시 경제적 취약 노인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CONTENTS

- I. 연구 목적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 III.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 IV. 인천시 질적 조사 결과
- 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연구명	인천시 노인의 가계구조 분석: 경제적 취약 노인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연구자	양지훈(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조수현(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초빙연구원)
작성자	양지훈(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김제희(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ICAS 정책이슈&진단은 센터 홈페이지(www.inlife.or.kr)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 7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인천은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은 가장 낮지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장 높음.
 - 노인부부가구가 가계 구조상 낮은 소득과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보다 취약함.
- 인천시 질적 조사 결과
 - 식비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함.
 -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노인의 대부분은 자녀로부터 받음.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은 본인이나 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실제 받는 금액도 적어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 수준이 미미함.
 - 전문가집단에서 최종적으로 노인에게 필요하다고 한 서비스는 대부분 2020년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됨.
- 경제적 취약 인천시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취약한 노인부부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마련
 - 취약한 노인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
 - 노인 관련 기관에서의 교육 강화
 - ① 노인 재무교육 확대
 - ② 효(孝) 사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회복
 - ③ 요양 인식 개선 및 웰다잉 지원

I. 연구 목적

- 인천시 베이비부머에게서 노년기 준비 중 경제적 준비는 가장 중요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영역임(양지훈·권미애, 2018).
- 높은 노인빈곤율(OECD, 2017)과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사적연금 가입율(금융감독원, 2018)을 볼 때, 베이비부머가 노년기 경제 상태에 대해 느끼는 불안은 타당함.
-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재 노인가구의 평균적인 소득과 소비 수준을 알아보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노인의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등 가계를 살펴보고 취약한 가계구조를 가진 가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취약한 노인 가구를 지원하고 베이비부머가 노년기 가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국내·외 통계에서 나타나는 노인 가계구조 현황 파악
- 노인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 정리
- 항목별 소득, 지출, 자산, 부채 현황 파악 및 가구 유형별 분석
- 소득 및 생활영역에 관한 노인 인식 및 현장 서비스 중요도 파악
- 취약한 노인 가구 지원 및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시

2. 연구방법

- 문헌 검토 및 정부기관 홈페이지 자료 정리

-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유형 및 소득계층에 따른 비교 분석
- 인천시 노인 대상 인터뷰 조사
- 인천시 소재 노인복지실천현장의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적 함의 제시

3. 문헌 및 정책검토

1) 노인의 가계구조

- 노년기의 자원 보유 및 접근성에 관한 문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며, 이와 같은 자원의 분포는 동거가구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김주연, 2017).
- 노인실태조사 및 선행연구에서는 독신가구, 부부가구, 자녀 동거가구 등에 따라 가계구조 및 경제적 위험이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함.
- 노인 가구의 빈곤과 불평등은 다른 가구 형태의 경제 상태에 비해 매우 취약하며 다양한 정부지원 및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여유진, 2013).
-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공적이전소득을 압도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의 확대로 공적이전소득이 주 소득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확대됨(김희삼, 2008).
- 가계구조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관련된 선행연구는 노인 빈곤을 중심으로 노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분석하거나 독신노인가구의 건강 및 심리적 상태의 어려움을 논하고 있어 일반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과 다양한 가구형태에 따른 가계에 관한 정보는 부족한 편임.
- 55세 이상 가구주 가계의 경우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39.6%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은 그 준비로 국민연금 가입을 언급하여(김순미, 2004), 예비노인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요구됨.

2) 노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 보건복지부의 노인 대상 정책사업은 취약성에 기반을 둔 잔여적 성격이 많음.

영역	정책대상		자격조건				
	노인+	노인중심	소득 및 자산	특성	보훈	단체	제한없음
생활지원	77	32	5	5	15	2	5
건강지원	38	20	7	4	5	-	4
보호	23	9	3	4	2	-	-
주거지원	21	13	8	3	-	2	-
고용지원	69	11	5	-	2	3	3

○ 인천시 노인 대상 정책사업은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한 여가 관련 사업이 많으며,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으나 1회성 사업이 다수임.

영역	계	자격조건				
		소득 및 자산	특성	보훈	단체	제한없음
생활지원	50	3	5	-	20	22
건강지원	19	5	-	-	1	13
보호	17	4	-	-	5	8
주거지원	3	-	2	-	-	1
고용지원	18	-	-	-	2	16

○ 17개 시·도 노인 대상 조례를 보면,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는 잘 제정되어 있으나, 주거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부족함.

영역	특별시(1)	광역시(6)	특별자치시(1)	도(8)	특별자치도(1)
생활지원	3	17	3	27	7
건강지원	1	12	0	18	5
보호	1	10	2	14	2
주거지원	0	2	0	0	0
고용지원	1	7	1	9	0

Ⅲ.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구성 및 노인특성을 잘 반영한 노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를 활용하였음.
-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노인가구 유형 및 소득계층별 비교, 7대 도시 비교 분석을 수행함.
 -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함.
 - 노인가구 유형은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 노인가구, 기타 노인가구로 구분하고, 소득계층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개인소득을 산출하여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Kruskal-Willis test를 진행함.
 - 7대 도시의 비교는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값을 산출한 후 인천시의 위치를 살펴봄.

2. 분석 결과

1) 인천시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 응답 노인은 여성(60.2%)이 많았으며 과반이 배우자가 있었음(56.9%).
- 초졸 이하의 노인이 58.4%로,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보다는 낮은 학력을 보임.
- 평균 연령은 74세, 총 가구원 수는 평균 2.13명이며, 노인가구원 수는 대부분 1명(50.6%) 또는 2명(49.3%)으로 나타남.

2) 노인가구의 가계구조

① 연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주택/농지연금, 공적연금 등의 순으로 소득액이 높음.
-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노인가구는 대부분 사적이전소득과 기초연금이 있었음.

-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누구와 동거하느냐에 따라 노인가구 소득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 개인과 가구원 소득으로 나누어보면 사적이전소득,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노인 개인의 소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이 없음.
 - 노인독신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 기타 공적급여에서 다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소득을 보임.
 - 노인부부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이 낮고 사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타 공적급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타 공적급여가 높고 사적이전소득액은 낮은 집단으로 나타남.
 - 기타 노인가구는 주거급여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집단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로 보면, 근로소득의 비율과 금액이 노인 가계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고소득층에서 매우 높아 가계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예측됨.
 -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액, 공적연금액, 주거급여, 기타 공적급여, 기타 소득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중산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기타 공적급여가 낮고, 사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타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남.
 - 고소득층은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 공적급여가 높고 생계급여가 낮은 집단임.

②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 대부분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금액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반면,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비율과 금액이 낮았음.
- 가구원에 따라 가구소비지출액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생활비가 노인독신가구의 두 배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생활비는 더 많이 지출되므로 소규모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노인독신가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집단,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높은 집단으로 나타남.

③ 자산 및 부채

-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보유 비율은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타 자산의 경우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노인독신가구는 부동산자산을 가진 비율도 낮고 부동산자산액도 적어 이들의 주거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특히 노인독신가구는 자산 전 항목에서 보유 비율이 낮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임.
- 고소득층의 결과를 볼 때, 소득이 많은 집단이 누적된 자산 또한 많다고 볼 수 있음.
- 부채의 발생은 실물자산의 신규 취득과 관련되고, 부채의 유지가 실물자산 보유 지속과 관련되어(김우영 · 이현정, 2010), 소득이 많을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보유한 부채액 자체보다 가계의 부채 지불능력을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28배,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03배임.
- 소득보다 자산(부동산 매각, 역모기지론, 금융자산 처분 등)을 활용하여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는데, 중산층인 노인부부가구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가계 재무건전성의 위험을 겪을 수 있음.

3) 경제적 인식

- 노인은 대부분 본인이 노후 생활비 마련의 주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75.8%), 자녀보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으로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던 것과 달리 본인 및 제도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비이며, 노인독신가구와 기타 노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 또한 높게 인식하고 있음.

4) 7대 도시별 노인가구의 가계구조

- 인천은 대전 다음으로 가구소득 및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낮고, 균등화한 개인소득 또한 세 번째로 낮음.
- 부채비율은 낮지만, 부채액은 높은 도시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두 번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첫 번째로 높아 타 도시와 비교하여 인천의 가계건전성은 부정적이라 볼 수 있음.
-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갚기 어려우므로 노년기 소득을 통해 상환할 수밖에 없음.

IV. 인천시 질적 조사 결과

1. 지역주민 인터뷰 조사

1) 조사목적 및 방법

-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지역주민 1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면접을 진행함.
- 남성 3명, 여성 1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2.6세였음.
- 소득, 지출, 건강, 대인관계, 자산 및 부채, 정책에 대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활용하여 공통적인 응답을 받고, 그 과정에서 개인별 경험에 따라 비구조화된 질문을 추가함.

2) 조사결과

2수준	1수준	
노후의 경제 상태를 염려함	노후 경제 상태에 불안을 느낌	부동산 및 임대소득이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음
	일 자리를 희망하나 여건이 어려움	예기치 않은 지출이 커짐
노후의 경제 상태에 도움이 됨	자산이 있음	자녀가 도움을 줌
	건강악화에 대해 염려함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영양 섭취 함
건강을 걱정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돌봄은 가족의 몫이라 생각함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이 다름
돌봄을 의지할 곳이 다름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음	
	공적 지원을 희망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함
		시에 바라는 지원이 있음

2.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조사목적 및 방법

- 인천시 소재 노인복지 관련 현장에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하였거나 관리한 현장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참여한 패널의 근무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2년이었으며, 6년에서 10년 사이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하고 있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11명, 노인일자리지원기관 9명, 노인의료복지시설 2명, 노인여가복지시설 4명, 그 외 4명이었음.
- 조사는 변이계수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총 3라운드를 진행함.
 - 1차 조사는 개방형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항목당 최소 2개, 최대 5개의 의견을 제시함.
 - 2차 및 3차 조사는 응답을 범주화하여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필요도를 조사하되, 3차 조사는 변동계수와 내적 타당도 기준을 초과하고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선별하였음.

2) 조사결과

영역	최종선정	
생활 지원	①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 동행: 산책, 병원 등	③ 사각지대 노인 발굴 및 지원
	② 고령 및 독거노인 집단 정리정돈, 세탁 등	④ 밀반찬 지원
건강 지원	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식생활 및 밀반찬	③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②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여가 프로그램	
보호	① 학대 노출 노인 사후관리	③ 독거노인 안심벨 설치 확대
	② 독거노인 가정방문: 독거노인지킴이	
주거 지원	① 고령친화주거환경: 안전손잡이 설치	③ 독거 및 빈곤노인 냉난방비 지원
	② 고령친화주거환경: 경사로 미끄럼방지 설치	④ 고령친화주거환경: 가스차단기 설치
고용 지원	① 노인능력별 맞춤형일자리 마련	④ 직업능력개발 교육: 자격증 및 전문교육
	② 일자리 수요처 발굴	⑤ 노인일자리 참여조건 완화
	③ 자원봉사 정보제공 확대	

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취약한 노인부부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마련

- 노인의 가구소득은 가족구성원의 영향이 크며, 경제활동인구와 함께 사는 경우 가구소득이 많아,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는 소득 창출이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남.
- 그 중 노인부부가구가 가계 구조상 낮은 소득과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보다 취약함.
- 저소득 노인의 노년기 소득 창출을 위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1차 대상은 노인부부가구가 되어야 할 것임.
- 공공부문에서 대표적인 노인일자리인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부부가구를 위한 근로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 중 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의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참여자 선발 기준을 조정하거나 가점항목을 이용하여 노인부부가구를 지원할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의 배점을 낮추거나 독거노인과 부부노인가구의 배점 차이를 축소
 - 연체 통지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부부가구 가점

2. 취약한 노인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

- 식비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함.
- 독신가구거나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기관 구내식당에서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례도 있었음.
-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저소득 노인이므로 경제 수준이 맞지 않지만 실제 영양섭취가 어려운 노인은 이용하기 어려움.
- 공동급식은 영양섭취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원과 관련이 있으며, 식습관 및 영양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센터와 같이 공공에서 장소 및 전문인력(자원봉사자)을 제공하고,

노인은 복지관 구내식당 정도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으로도 연계될 수 있음.

- 독거노인 및 의료비 지출이 높은 지역을 권역별로 구성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또는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서의 공동급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연구결과 활용

- 전문가 집단에서 최종적으로 노인에게 필요하다고 한 서비스는 대부분 2020년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일반노인 또한 유료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함.
-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 동행, 고령 및 독거노인 집단 정리 및 세탁, 여가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등의 의견을 실천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임.

4. 노인 관련 기관에서의 교육 강화

1) 노인 재무교육 확대

- 인천은 7대 도시와 비교하여 적게 벌고 적게 쓰는 행태를 보임.
-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가장 낮지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장 높으며, 중산층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위험함.
- 부채의 발생은 대부분 노년기 임대소득을 기대하며 퇴직금 및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주거용 건물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부채를 포함한 부동산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부동산

정책 변화, 책정가 하락, 공실 발생,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관리 부실 등).

- 부동산으로 인해 정책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처분소득이 없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함.
- 이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시나리오별 재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효(孝) 사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회복

- 노인은 대부분 사적이전소득이 있으며 주로 자녀로부터 받음.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 가족문화가 줄어들고 부모부양의 책임이 줄어들어도 자녀는 여전히 경제적·정서적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줌.
- 그러나 노인은 대부분 본인이나 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실제 받는 금액도 낮아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 수준이 미미함.
- 노후의 준비는 모든 세대에서 개인 또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도 자녀 부양의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생계 책임보다 정서적 교류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함.
- 노인이 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자녀세대의 부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효 사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문학 강의를 노인 및 자녀세대에게 제공하고 인식개선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효도 문화를 지역주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3) 요양 인식 개선 및 웰다잉 지원

- 경제적 준비의 대부분은 소득 마련에 있으며, 건강 악화나 죽음에 대한 미래 준비는 부족함.
-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재무교육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건강지원이 요구됨.

- 재가요양급여 및 연명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요양급여는 긍정적임.
- 재가요양급여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직업 소명, 돌봄 전문가로서의 자세 등)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적극적 안락사로 약물을 활용한 자살, 소극적 안락사로 섭식 거부, 치료 거부를 생각하고 있음.
- 이는 인간답지 못한 간병, 자녀 및 사회에 부담을 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기인함.
- 건강악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반면 죽음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노인이 보건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지만 죽음 관련 처리는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임.
- 포괄적인 내용(재무, 안락사, 애도, 심리변화 등)을 담은 웰다잉(well dying) 프로그램이 필요함.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8).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2018년 5월 18일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자료.
- 김순미(2004). 도시가구의 연금에 관한 연구 -홀별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1), 205-222.
- 김우영·김현정(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In 한국은행.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요인과 평가(pp 3-42).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주연(2017). 한국 노인의 가구형태와 가구 내 자원분포. *한국인구학*, 40(1), 1-28.
- 김희삼(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1-130.
- 양지훈·권미애(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연구보고서.
- 여유진(2013).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 185-219.
- OECD. (2017).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 (Accessed on 19 March 2019).

ICAS 정책이슈&진단 (2019-03)

인천시 경제적 취약 노인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발행인 : 원 미 정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처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TEL. 032-715-5491 FAX. 032-715-5319

인쇄처 : 디자인넷(032-201-877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에 있음